

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145호)

- 2000. 6. 24.
- 총무재무위원회
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5. 17.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0. 5. 22.
- 다. 상정일자 : 2000. 6. 24.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100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(1회1일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재정국장 신종식)

가. 제안이유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,
- 구세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며,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분정리등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(안 제2조)
 -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(①항)와 형제·자매(②항)를 포함.
- (2)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(안 제3조의2)
 -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등록명의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·자매를 포함

(3) 주차장에 대한 감면 삭제(안 제10조 및 제11조)

-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(재산할)를 5년간 면제하고 있으나,
-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세제 감면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과세전환하고자 함.

(4) 기타 조문정리등 자구수정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재근)

가. 검토내용 : 생략(검토보고서 참조)

나. 검토결과

- ☐ 지방세 감면조례를 재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
☐ 주요내용은

(1)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

-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에 “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”에서 “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”로 확대함. (안 제2조제1항)
- 자동차면허세를 면제하는 대상을 “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”에서 “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형제, 자매”로 확대함. (안 제2조제2항)
-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이나 세대분거하는 경우에는 면허세를 추징함. (안 제2조제2항 단서)

- (2)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,
 -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장애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며,
 -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가경우에는 면허세를 주장함. (안 제3조의2제1항)
- (3)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전통 건조물 보존법의 폐지로 관련조항 삭제 (안 제9조제4호)
- (4)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며,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므로 세제감면이 불필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(재산할) 감면조항 삭제(안 제10조)
- (5)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조항 삭제(안 제11조)
- (6) 아파트형에 대한 감면근거법령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'99. 2. 8 개정되어 관련조문 개정(안 제18조)
- (7)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이 1999. 9. 7 제정되어 관련조문개정(안 제20조)
- (8)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근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가 '99. 5. 24 개정되고,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'99. 5. 24 신설되어 관련조문개정(안 제25조의2)

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,
- 주차장 사업에 대한 감면을 삭제함으로써 차량의 도심진입으로 인한 교통난의 가중을 방지하고, 수익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세제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, 시초구 공고 제131호로 2000. 4. 10 ~ 2000. 4. 29까지 입법 예고된바 있음.

-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, 일부과세등의 조례를 개정시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, 행정자치부 세제 13400-210(2000. 2. 25)호로 지방세 감면조례개정준칙통보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조문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>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확대근거가 무엇인지?

답> 확대한 근거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보훈시책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세감면조례 개정안이 준칙으로 통보되어 이를 근거로 확대한 것이며 동사항은 25개구가 공통사항임.

질> 국가유공자의 직계존·비속과 존·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들을 국가유공자등으로 확대하여 공동명의로 등록, 감면혜택을 볼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편법이 있을 것이며, 구세가 감면하리라 생각하는데,

답> 편법으로 등록할시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악용될 우려는 있습니다만, 제도상 공동명의로 1대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수감면도 약 300만원으로 보고있음.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 : 없 음.

6. 수정안의요지 : 없 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요지 : 없 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10. 체계자구정리내용 : 없 음.